

# 민주 '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지도부는 고심

“정권 퇴진 위한 투쟁 선언해야”  
야권 연대 주도... 여론 결집 나서  
지도부, 정치적 부담 등 고려 신중  
“개별의원 차원, 당 공식입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민주당내 일각에서 감지된다. 당 지도부도 정부 반대 투쟁에 힘을 실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국민, 당원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대표 1심

선고가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인 만큼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 한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와 ‘천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27일까지 광화문·용산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병행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장외집회는 3차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야권과 함께 대정부 투쟁 연합 전선을 꾸린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녹음 파일 공개 등으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나아가 윤 정부의 실정과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앞세워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40여명이 모인 야권 의원 연대 모임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와 30여명으로 구성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가 주도하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이 대표 선고 이후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다”며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야권과 시민사회가) 뭉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 역풍이나 방탄(비판)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다”며 “민주당도 탄핵 열차에 빨리 탑승해야 한다”고 했다.

원의 친명(친이재명) 조직도 가세했다. 친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국민은 상식으로 판단한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70~80%의 국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60%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며 “민주당이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안팎으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한 바 없다”며 “개별 의원 차원”으로 선을 긋고 있다. 탄핵을 선불리 꺼냈다가 자칫 보수층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탄핵이나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특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낱알이 파헤쳐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전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 지원조례’ 통과

고 김호진 도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로 공공이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고(故)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 김 의원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결과물이어서 일명 ‘김호진 조

례’로도 불린다.

농촌의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무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대신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지만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뜻을 기려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 홍기월 “노벨상 도시 광주서 문학상 예산 삭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가 ‘문학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 문화예술상 문학부문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월(사진) 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가 문학 도시로 대표되고 있는데 반해 문학 부문 예산이 축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학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 문화예술상 조례’에 따라 문학·한국화·서양화·국악 부문에 대한 문화예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각 부문별로 시상행사를 변경 추진

해, 문학부문의 경우 1500만원의 기정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행사 규모를 축소해 기정액의 33.3%(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홍 의원은 “세수결손 사태에 행사장 규모 축소는 적절한 접근이지만, 광주 문학 발전을 위해 기정예산의 감추경 보다는 시상금 확대 등을 통한 온전한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법규를 개정해 시상인원 등 수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제도적 개선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 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이영일 전 의원 고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20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영일 전 의원은 한 인터넷매체 5월26일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거나 “무기교가 될 리고 비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됐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

나와 시민 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법원과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군 ‘5·18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 차례 확인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차례 허위성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자 고발을 결정했다. 노병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尹 정권 조기 종식”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李 추가 기소에 “검찰 독재 정권, 정치 보복”

검찰이 ‘경기도 법원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겨냥해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주문한다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